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 - 1979년에서 1993년을 중심으로 -

Time Series Comparison of Urban Wage Workers' Education Expenditure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류정순 · 이희자*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Ryu, Jeong Soon · Lee, Hee ja*

School of Human Ecology, Myungji Univ

Abstract

Urban wage workers' education expenditure among different social classes from 1979 to 1993 has been compared. Education expenditure has increased much more than that of income resulting from income increase and government policy. Education expenditure gaps among social classes have showed to be an increasing trend although the ratio of education expense to the income has increased among low class families. Average income elasticity was 1.1 and this result showed that education expense was luxury good. Income elasticity of education expense among low class families have fluctuated more than any other classes resulting from construction business cycle and housing rent increase.

Average Gini coefficient was 0.38 and turned out to be highest among 9 household expenditures, however it was in the trend of improvement from 81. But from 91 Gini Coefficient went up high again. Main reason for this increase was due to high social class families'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

Government's strong policies to enhance equality level of education opportunity and to support low class families are urged.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헌법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중학교 진학율은 99.6 퍼센트, 고등학교의 진학율은 94.6 퍼센트에 달하여 중등교육의 취학 기회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김관복,1990).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94년도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17조4,640억원으로 공교육비

16조 7,578억원을 능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교육기회의 수익자 부담에 입각한 상품화 현상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각 가계는 부담할 수 있는 한도껏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질과 경제력에 따라 실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 풍토에서 교육은 거의 유일한 열린 계층이동 통로인데,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비의

사적 부담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 할 수 밖에 없으나 교육비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계 어린이의 복지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교육 문제는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사회정의론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정책 당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과외의 양성화, 자비유학 및 조기유학의 자유화, 교육개방화, 조기입학, 속진제, 월반제 등의 일련의 정책을 도입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2. 연구목적

이와 같은 공교육 투자의 결핍과 과잉 교육열로 인한 심각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79-1993년 동안의 한국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지출 패턴의 시계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가계의 교육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교육비의 계층 간의 격차와 불평등 정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 후,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상품의 유효수요가 부족한 저소득 가계의 교육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1979-1993년 동안의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 교육비 지출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연구문제2> 1979-1993년 동안의 도시근

로자 가계의 계층 간의 교육비 격차와 불평등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1979-1993년 동안의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지출패턴 변화와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교육기회 균등화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육비 지출과 불평등도 측정 이론

소득과 관련된 가계교육비 지출은 케인즈(Keynes)의 절대소득가설, 전통신고전파 이론의 소득탄력성 및 벡커(Becker)의 인적자원 투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교육정책과 관련된 가계교육비 지출은 인적자원 투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불평등의 정도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살펴볼 수 있다. 케인즈의 소비함수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특정 품목, 즉 교육비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

그러므로 교육비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_o = f(E_1) + v \dots (1)$$

여기에서 E_o : 교육비

E_1 : 소득

소득에 따른 교육비의 지출패턴은 소득탄력성으로 파악해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E_o = b + a \ln \sum E_i + v \dots (2)$$

여기에서 a : 소득탄력성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 비율에 따른 특정 품목의 소비지출의 변화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1)을 양대수화한 함수식(식2)의 회귀계수 a 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만일 $a < 0$ 이면 열등재, $0 < a < 1$ 이면 정상재, $a > 1$ 이면 사치재로 분류되며 소비에 있어서 소득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목에 대한 성취되지 않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늘 때 다른 비목보다 우선적으

로 그 비목에 자원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슈츠(Schultz), 벡커(Becker) 등의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교육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이다(생활경제모임, 1993)

따라서 각 가계는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수록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가계 예산제약과 현재의 교육적 환경에서, 교육비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투자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 위주 사회에서의 투자 기대 이득은 명문 대학교의 입학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가계의 교육비는 교육제도, 특히 대학입시제도와 과외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각 가계는 경제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껏 교육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의 계층간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하며 지니계수를 이용할 경우 이를 소비지출지니계수 혹은 준지니계수라고 부른다(국은경제연구소, 1993).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n명의 지출이($y_1, y_2, \dots, y_i, \dots, y_n$)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G = \frac{\Delta}{2\mu} \quad (\text{식 1})$$

여기에서 μ 는 평균지출을 나타내며 분자의 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y_i - y_j| \quad (\text{식 2})$$

2. 선행연구

교육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선자(1968)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교육비 지출은 총생계비의 18.3 퍼센트이며 상급학교

로 갈수록 교육비 지출액은 현저하게 높아지며 5분위 계층별 교육비 부담의 정도는 최하위 계층인 5계층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은 2계층이며 3,4계층은 비슷한 값을 보이며 최상위 계층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희(1976)는 교육비를 의무교육비와 선택교육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의무교육비와 선택교육비의 비율은 6.1: 3.9이고, 총생계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6%로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소비 중 교육비의 지출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크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희(1980)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출이 많고 가계 총소득 중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비율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승애(1985)의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저소득층의 3배정도이며 생계비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별 교육비 지출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많았으나 생계비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하류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김관복(1990)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 취학율은 56.9%이며 유치원 교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받으며 유치원 교육을 받은 학생과 못 받은 학생의 학업성적의 격차는 학년이 높아져 갈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공은배와 천세영(1990)의 한국의 교육비 수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계부담 교육비는 총GNP의 6.8%에 달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사교육비보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사교육비가 더 급속하게 증가되어 1972년에 대학생과 국민학생의 학생 일인당 사교육비 비교지수가 4.78: 1에서 1990년의 경우 1.61: 1로 현격히 줄어 들었다.

손경애(1992)의 고교생의 과외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서울시내 거주 인문계 고교생의 94.2%가 과외 학습의 경험이 있으며 거의 반

수가 현재 과외를 하고 있으며 평균과외 비용은 315,000원으로서 이는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3.7%, 한달 학교 수업료의 6배에 이른다. 특히 과외를 받는 학생의 5%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하며 이들의 부모는 전문기술직, 고학력, 고소득층이었다. 과외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학년, 아버지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주거형태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44.3%),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51.7%),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51.5%)가 여타의 경우보다 과외비용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윤정혜(1994)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부담 교육비 중에서 납입금과 사교육비의 비율은 국민학생 15: 85, 중학생 45: 55, 인문계고교생 46: 54로 나타났으며 GNP 대비 사교육비의 총량규모는 1977년 2%에서 1993년 7%로 늘어났다.

III.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조사 30년(통계청, 19

93)에 수록된 1979년부터 1992년 소비와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자료와 도시가계연보(통계청, 1994)에 수록된 1993년의 도시근로자 가계의 동일 항목의 횡단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10분위 계층의 각 분위별 명목교육비를 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실질교육비는 <표 1>과 같다. 각 분위를 모두 분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여 오히려 계층별 격차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최하위계층(1분위), 중간계층(5분위), 평균계층과 최상위계층(10분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학생이 없는 집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계층별 평균 교육비 자료가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집만을 조사한 타 연구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보다 지출액이 훨씬 적게 산출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품목별 분류방식으로 비목을 분류하기 때문에 교육적 용도로 사용된 체육복, 소품 등의 김밥, 교통비 등이 교육비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은 EXCEL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 소득탄력성, 지니계수 등을 산출하고 그래프를 그렸다.

<표 1> 1979-1993년 동안의 10분위 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원)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1분위	5,940	3,811	4,489	5,846	6,370	8,764	10,719	12,373	12,950	11,971	17,194	21,340	21,876	27,257	37,223
2분위	7,395	5,806	6,737	7,865	7,327	9,187	10,234	12,640	14,153	14,596	20,902	20,864	26,511	32,458	38,537
3분위	8,390	6,880	7,489	10,656	9,750	12,087	10,046	13,351	14,930	17,122	19,952	29,603	35,415	39,939	54,314
4분위	11,066	10,741	8,755	10,398	10,874	11,867	14,333	18,463	17,295	19,006	27,889	31,520	39,847	44,448	71,241
5분위	12,345	10,906	10,657	13,935	16,157	18,205	16,281	19,203	22,701	24,744	36,431	37,658	47,016	54,590	76,417
6분위	15,962	14,189	13,583	13,551	17,329	19,581	21,474	25,276	26,625	28,592	37,155	42,311	50,390	66,637	94,741
7분위	19,447	17,648	18,156	21,004	23,104	22,788	23,970	24,430	32,064	36,401	47,641	50,649	60,355	73,527	88,332
8분위	26,600	24,642	25,977	25,346	30,329	29,759	29,616	39,517	43,146	44,018	54,837	62,110	69,477	77,498	116,516
9분위	34,187	30,822	31,473	32,757	34,623	40,504	43,699	48,877	52,549	54,747	70,524	71,883	77,426	91,745	190,633
10분위	57,709	49,851	54,591	52,157	56,256	64,480	72,234	73,188	86,433	82,286	89,805	100,988	100,705	135,185	215,448
평균	19,905	17,574	18,193	19,346	21,209	23,717	25,255	28,726	32,276	33,344	42,239	46,893	52,907	64,335	88,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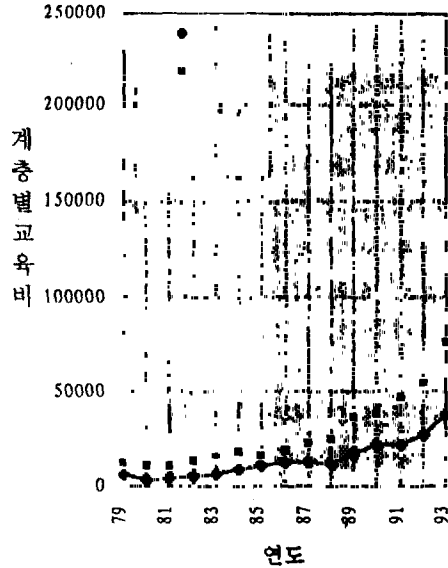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도별 계층별 월평균 교육비의 변화 추이

(단위: 원)

월평균 교육비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그림 1>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층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91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계층의 교육비는 79년과 80년 사이에는 19,905원에서 17,574원으로 9.3% 줄어 들었다. 이 해의 감소는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과 80년 7월 30일에 발표된 대학졸업 정원제, 대학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실시, 과외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조치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후 1988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과외완화 조치가 있었던 88-89년 사이에는 한해 사이에 무려 24.6%가 증가했으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교육비의 지출액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과열과외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93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월평균 교육비는 오히려 37.3%나 증가되었다.

그동안 교육세 신설(81), 독학사 시험실시(90), 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시행(85) 등의 공교육의 정책변화가 있던 해의 교육비의 지출패턴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나 과외 및 입시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해에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교육 정책보다는 과외 관련 정책이 자녀의 장래를 위한 교육투자에 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학벌과 연줄 위주의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어 주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앞서기 때문에 교육비를 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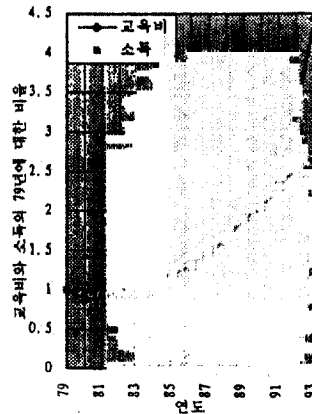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계층별 월평균 교육비의 변화추이

1분위계층과 10분위계층의 차이는 79년에 51,768원이었으나 86-87년 사이에는 73,483원이 되고 91년 이후 급격히 커져 93년에는 그 격차가 무려 178,225원이 되었다. 91년 이후 10분위 계층의 급격한 교육비 증가는 개방화, 세계화와 더불어 조기 해외유학, 해외연수 등의 큰 단위의 교육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최하위 계층과 5분위의 격차는 84년까지 대략 6,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다가 그 후 부터는 조금씩 커져서 93년에는 12,000원 정도에 이르며 1분위 계층과 평균의 차이는 82년까지 13,000원대에 머물다가 83년에는 14,839원이었으나 88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93년 50,944원이 되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 교육비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계층과 평균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커지는 것은, 머잖은 장래에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교육구매력을 획득하게 되

는 중산층에서 상류층의 행태를 따르는 늘이는 하향전파효과(down stream effect)가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측된다.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학력은 직업과 소득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황일청,1992)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교육기회 불평등의 심화현상은 곧 계층이동 통로의 차단을 뜻하기 때문에 빈곤계층 자녀세대의 빈곤 탈출의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2. 각 년도의 월평균 소득과 교육비의 79년에 대한 비율

79년의 교육비를 1로 보았을 때 각 년도의 교육비의 비율을 79년의 소득을 1로 보았을 때 각 년도의 소득의 비율과 대비시켜 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80년 과외금지 조치 이후, 82년까지는 79년보다 교육비가 소득을 밀돌고 있다. 그러나 83년부터 교육비의 비율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며 88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격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79-93년 동안 소득은 46만원에서 121만원으로 2.6배 정도 늘어난데 비하여 교육비는 4.4배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특히 교육비는 최근(91-93년) 2년 사이에 2배가까이 늘었는데 만약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년에는 11.6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급격한 교육비 증가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초입에서 무한 경쟁 상태에 놓인 교육을 지배하는 승패의 논리에서 오는 경계심과 두려움 때문에, 가계의 다른 쓰임새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어서 교육비가 가계재정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짐작이 가게 한다.



<그림 2> 각 년도의 월평균 소득과 교육비의 79년에 대한 비율

3. 년도별, 계층별 월평균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 변화추이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계층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평균계층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경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며 79-89년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90년 5%를 넘어선 후 93년에 7.8%가 되었다. 1분위 계층은 80년 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93년에는 가장 큰 비율인 9%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변화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불경기 때에는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교육을 희생할 수 밖에 없으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한정된 가계 자원을 다른 어느 비목보다도 교육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석과 이상현(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중에서 과거 학원수강의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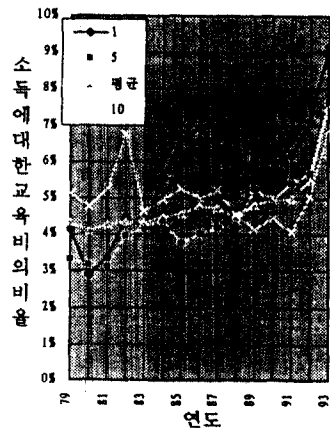
있거나 현재 학원 수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또한 학습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자들의 사례조사에 의하면 상계동에 사시는 황모 할아버지(67세)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맹인 걸인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구걸하여 번 돈으로 국교 4학년 딸의 속셈 과외비로 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최하위 계층에서도 과외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 계층에서 소득에 대한 교육비 비율이 그 어느 계층보다 높고, 교육비의 비율이 80-93년 사이에 3배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계층과 비교한 지출액의 격차 폭은 날이 갈수록 벌어 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10분위 계층은 79년 5%로서 가장 높았으나 차츰 줄어들어 89년부터는 가장 낮아 졌다. 그러나 이 계층에서도 91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년 사이에 무려 1.9%의 증가를 보였다. 5분위 계층은 1분위 계층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지만 1분위와 비슷한 패턴의 비율을 보여 79-88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88년부터 증가되어 93년에는 7.6%에 이르러 1분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앙일보(1995, 9. 22., 50)의 조사에 의하면 가계지출 비목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으로 교육비를 든 가계가 80년 30%에서 93년에는 40%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감과 압박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토록 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지고 교육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질은 타국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 않다. 토폴성적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가계지출의 1%대를 교육비로 할애하고 있는 프랑스의 학생들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뒤떨어 지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외 열풍은 차세대를 깊어질 인재들의 자질 향상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유형의 시험에 대비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투자와 인적 자원의 기본 자질향상을 위한 투자는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각자의 자질과 성향이 무시된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획일적 평등주의, 단선적 원칙과 가치관에 중속된 경쟁강박증, 사회적 책임의식 및 도덕성의 결핍, 사고의 자율성 결여, 집단적 감정몰입 같은 국민적 성향을 양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소프트화, 다양화, 개성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통성있고 유연한 가치관, 세심한 분석력과 자유로운 상상력, 창조적 직관력 등의 능력 함양에 필요한, 교실 이외의 모든 공간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극소화시켜 돈들여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는 그 투자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교육비 과소비는 과다소비일 뿐만 아니라 과오소비 또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년도별, 계층별 소득에 대한 월평균 교육비의 비율 변화 추이

4. 계층별 월평균 교육비의 소득탄력성 변화 추이

소득탄력성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경기에 동행하여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하위계층에서는 특히 건설 경기와 전월세 가격변화에 민감하였고 88-89년은 경기 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전 계층에서 커졌다. 5분위계층과 평균계층의 소득탄력성은 경기변화에 따라 1을 전후하여 비교적 좁은 폭으로 오르내리는 안정된 패턴을 보였으며 평균 소득탄력성은 1.167로서 사치재로 나타났다. 79-80년사이의 2차 석유파동은 최하위 계층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혀 79-80년 1분위계층의 탄력성이 -1에 이르게 되었다. 탄력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취학 자녀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취업전선으로 내보내는 가정이 꽤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86-88년사이 이 계층에 다시 탄력성이 부의 값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급격한 집값과 임대료 상승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사 또한 잦았던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집세를 감당하느라 교육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이근식, 1990).

오르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자녀들도 전학을 시킬 수 밖에 없는데, 전학에 따르는 필수재적인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학교 간의 진도와 학력의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교육의 질은 교육비로 나타나는 결과보다 더 열악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으며 그 영향으로 주가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중상위계층에 불로소득이 많았을 때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1분위 계층은 81-82년과 83-84년의 소득탄력성을 각각 6.87과 6.33까지 늘어 소득이 1% 증가할 때 무려 7%

가까이 교육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증등 해외건설 때 무려 7% 가까이 교육비를 증가시켰다.

분을 타고 이 계층의 가계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아진 점과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다른 지출 품목보다 성취되지 않은 욕구가 교육 품목에 커서 늘어난 소득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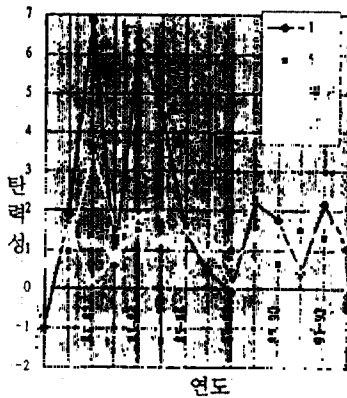
교육비 지출은 다른 소비와 달리 인적자원에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저소득층의 이러한 소비패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은 소득이 불안정하며 불황 때 실업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계재무 관리가 항상 소득보다는 단기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장기 가계 재무관리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저학년의 기초부족은 고학년의 학습부진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불규칙한 교육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분위의 소득탄력성은 -1.318에서 3.533까지의 분포를 보여 1분위보다는 덜 심하지만 경기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4-85년의 불황은 이 분위계층의 가계의 교육비를 -1.318로 크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88-89년은 경기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과외금지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인하여 2.302로 늘어나 이 시기에 이 계층에서 교육비를 위하여 가계의 다른 쓰임새를 얼마나 줄이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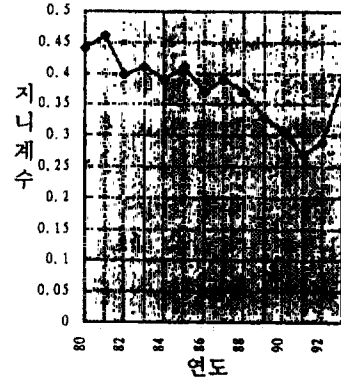
10분위 계층의 소득탄력성은 91년을 제외하면 0.05에서 1.87까지로서 타 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좁은 폭으로 경기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88-90년에는 타 분위와 마찬가지로 불황기에도 교육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1-92년에는

무려 3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산출해본 바 <그림 6>과 같다.



<그림 4> 계층별 교육비의 소득 탄력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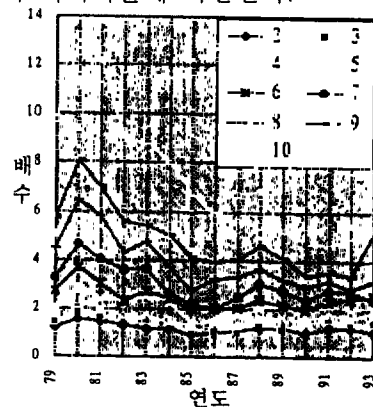


<그림 5> 교육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5. 불평등도 변화 추이

지니계수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0.38로서 1991년의 소득 0.32와 소비 0.16, 교육교양오락비 0.21(국은경제연구소, 1993)보다 월등 높게 나타났으며 9대가계지출 비목(식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교육교양오락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잡비, 의료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교통통신비의 지니계수 0.24보다 1.58배 높은 값을 보였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을 띄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비의 불평등도가 소득이나 다른 어느 비목의 소비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81년 0.4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더불어 차츰 낮아지며 특히 86년 이후 노동자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데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낮아져 91년에는 0.27에 이른다. 그러나 91년 이후 차츰 높아져서 93년에는 0.39가 되었다. 지니계수 상의 불평등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년도별 각계층 교육비의 1분위계층 값에 대한 배수를

2,3,4분위는 대체로 1.5-2배 정도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5분위부터 경기변화에 따른 년도별 격차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격차의 폭은 커지고 있다. 5분위 계층과 평균 또한 80년에 각각 4.6배와 2.9배로 나타났으나 93년에는 2.4배와 2.1배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10분위는 80년 13배가 넘었으나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91년에는 4.6배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다시 늘기 시작하여 93년에는 6배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특히 9분위계층은 92-93년 1년 동안에 2배가 늘어났다. 이와 같이 91년이후의 불평등도의 악화는 상위층의 과다지출에 기인한다.



<그림 6> 년도별 각 계층 교육비의 1분위 값에 대한 비율

VI. 논의 및 결론

빈곤가정 어린이는 교육수준이 낮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능력이 타 계층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질이 낮아 지적 자극을 충분히 받아 능력을 계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므로 교육을 위하여 할애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이준구, 1992). 인간의 타고난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며 이같은 불평등을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곳에서 비로소 정의가 문제된다(롤스, 1990). 정의로운 사회란 자연적인 우연이나 사회적인 우연을, 누구나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롤스(전계서, 1990)는 정의의 원칙으로 모든 이에게 동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과 사회의 최소 수혜자 계층을 위시한 모든 성인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사회경제적 차등을 용납하는 제2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경제사회에서 평등과 효율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다수의 탈락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국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질 때 경쟁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가치이지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의 차등은 '최소수혜자 계층을 위시한 모든 성인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즉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9-1993년 동안의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교육비는 명목지출의 12.7배, 실질지출의 4.4배 증가하였으며 계층별 교육비, 소득에 대한 교육

비의 비율, 소득탄력성, 등의 모든 지표가 교육비의 증가현상과 계층 간의 교육투자 격차의 심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91년 이후 더욱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교육비의 불평등도는 소득이나 다른 어느 가계지출 비목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91년 이후 악화되어 93년 0.3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자 부담에 입각하여 상품화 되어 공교육의 장 밖인 과외교사와 과외학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는 평가기관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70-80년대의 부동산 투자가 정보와 재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이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의 교육투자 또한 재력과 지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합법적으로 이기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에 있다. 유아 때부터 영어과외를 하고 방학 때는 현지에서 어학 연수를 받은 학생과 아이를 방안에 둔 채 문을 밖으로 걸어 잠그고 일나간 어머니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수업시간에는 쏟아지는 잠을 주체를 못하는 학생 중 누가 영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입시 문제가 공교육의 장에서 배우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계층 간의 교육여건의 격차와 불평등도의 심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결코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할 수 없다.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과 계층 간의 격차는 과외와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커져 왔다. 또한 오늘날 한국 학부모들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적자가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렵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기 자녀는 경쟁력있는 인재로 키워야겠다는 일념으로, 입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기 가계 중심의 이기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

해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자식의 장래에 대한 생계불안이 깔려 있으며 이 불안감은 학력 간의 소득의 격차가 크고 복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교육과소비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교육 정책과 복지정책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을 통해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교환하고 획득하는 일상적인 통로인 연줄망이 사회적 자원への 접근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연줄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연줄의 유대는 직업,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고 강해진다. 따라서 개인적 연줄은 계층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위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임희섭과 박길성, 1993, 182). 이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대학 특히 명문학교의 입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소득, 상위계층의 배우자 획득 및 연줄망의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단순히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자원への 접근을 차단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한국의 교육은 진정한 능력보다는 능력의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벌위주로 왜곡되어 왔으며 부모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

황일청(1992, 172)은 가난한 사람들은 장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소외된 계층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며 이들의 불만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권태준(1989, 67)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계층에서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차 싹트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에서 만약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의 경쟁 지향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유대의 끈은 약해지게 된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사회정의의 실현과 무한 경쟁에서 오는 시민사회의 균열을 막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평등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지난 몇년 동안 부분적인 입시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어, 91년 이후 교육비의 격차는 더욱 증폭되었으며, 예전에 없었던 조기유학, 해외연수, 수능과외, 논술과외, 영어회화과외, 영어듣기과외, 영유아과의 등을 보급시키는 역할을 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수능과 논술 시험의 도입과 같은 작은 개혁은 오히려 과잉 교육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정책당국은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와 교육과소비 현상은 정부 주도 하에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능력은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만 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어렵다면 미봉책으로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것과 예능을 포함한 전 과외학원과 어학연수 알선업체 정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생 몫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그들의 납입금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한다.

언론과 지식인은 교육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벌에 집착하는 낮은 가치기준을 가진 학부모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사회는 보다 더 풍요롭고

보통사람 모두가 생계불안 없이 편안하게 살아 갈 복지사회가 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녀는 학벌의 덕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 몫의 불이익을 감수할 자세로서 명문대학의 집착을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이러한 때 자녀들은 의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며 참교육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사이에서 소외된 계층의 동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사회적 혜택을 되돌려 주는 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자(1968), 가정경제에 있어서의 교육비 지출, 대한가정학회지 p165-182
-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90-91
- 권태준(1989), 분배의 의식화 시대, 나남
- 공은배, 천세영(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 김관복(1990), 유아교육 기회의 균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웅석과 이상헌(1994), 소년소녀 가장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일희(1980), 중등학교의 사교육비와 선정된 환경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p59-73
- 박상학(1992), "미일독과 비교해 본 한국가구의 소비지출행태", 국민경제리뷰, 8월: 6-18
- Becker, G.S.(1991), 가족경제(생활경제연구모임 역)
- 손경애(1992), 고교생의 과외실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신세호 외(1991),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혜(1994), 한국가계의 경제적 복지 평가, 한국가족학회 주최 세계가정의 해 기념 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 이근식과 김태동(1990),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p137-138
- 임희섭과 박길성(1993),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82
- 최승애(1985),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1994),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 황일청(1992),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172
- Rawls, J.(1990), 사회정의론 (황경식역), 서광사